

光州日釈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194호 1판 (음력 1월 20일)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소극 행정'

담당 공무원 수 턱없이 부족 … 현장 행정은 꿈도 못 꿔 보상업무 외부에 맡겨 업체들 100억 대 추가비용 떠안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인 광주시 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토지보상 업무 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등 '소극행정'을 되 풀이해 애꿎은 업체와 토지 소유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겉으로 적극행정을 강조하면 서도, 공무원 1명에게 대형 민간공원 3곳 업무를 동시에 떠맡도록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배정해 업무현장에선 적극행정은 커녕 탁상행정(책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 을 하기에도 벅차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 온다.

반면 강원도 등 타 지역은 토지보상 담 당 공무원을 직접 배정해 진행하는 방식 으로 사업비용과 민원발생을 줄이는 효과 를 내고 있다. 민간공원 사업현장에서 지 금이라도 광주시가 민간공원 업무 TF구 성 등을 통해 담당 인력을 대폭 늘리고 해 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 는 이유다.

광주시는 "10개(9개 공원) 민간공원 특 레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마 무리하고 조만간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 암산·신용·중앙(1·2지구)·중외공원이다. 중외공원을 제외하고는 우선 협상 대상자 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따라 토지 보상,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원일몰 제 시한인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보상 관련 위·수탁 협약 등 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는 민간공원 10개 사업자 모두 한국감정 평가원과 토지보상 업무 관련 일괄 위탁 계약을 맺도록 했는데, 관련 비용만 100 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갑자기 막대한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 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인 전국 35개 자치단체 중 부산시를 제외 진행해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업체들과 협 약조건을 사전 조율하는 등 충분한 협의 를 통해 산하 도시공사에 보상업무를 맡 겼다.

결국 전국 자치단체 중 광주시만 토지 보상 업무를 외부에 맡겨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추가 비용을 떠넘기는 꼴이 된 셈 이다. 특히 광주시가 사업 초기 보상업무 를 직접 추진하기 위해 산하 종합건설본 부와 도시공사에 보상평가 업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체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두 기관은 당시 해당 업무를 위해선 70 명 안팎의 인원이 필요하다며 인력난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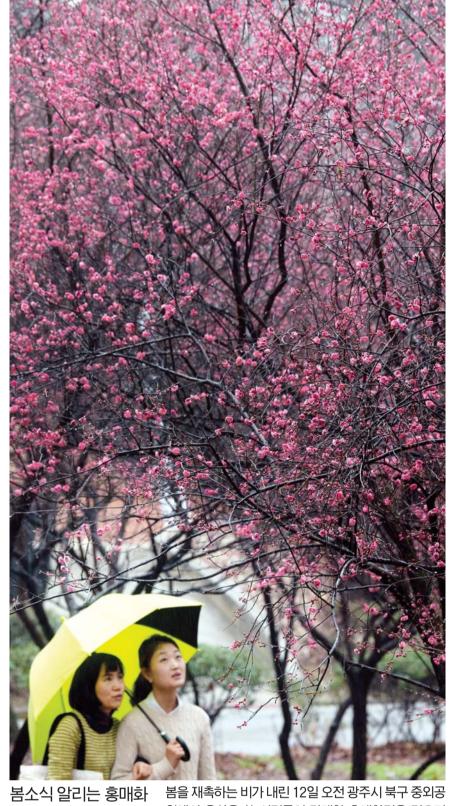
그러나 강원도 등 타 자치단체의 경우 공원 1곳당 공무원 1~2명이 보상업무를 맡고 있으며, 광주지역 10개 사업자와 토 지보상 업무 위탁계약을 맺게된 한국감정 평가원도 25명 수준의 인원을 투입할 예 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엔 업체 부 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접 보상업무 를 추진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인력난도 문제였지만, 시에서 보상 업무를 맡게 되면 일시적으로 1조원 안팎 의 (토지)보상비가 지출로 잡히고 재정자 립도도 상승해 국고보조금이 축소되는 불 이익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사업규모가 커 시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고 덧붙였

업체와 도시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은 광 주시의 무성의한 업무 대응에도 볼멘 소 리를 내고 있다. 중앙공원 비상대책위원 회의 한 간부는 "최근 업무 관련 광주시 간 부들과 만나 추가 지출로 업체들이 사업 을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 었더니, '(사업을)그만 두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무책임한 말만 하더라. 모든 게 이런식"이라면서 "민간공원 관련 재판 에선 광주시가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물 이라고 주장하더니, 이런 게 적극 행정이

업계 한 관계자는 "일선 구청에도 보상 담당자가 배치돼 있는데, 광주시는 직원 하곤, 자치단체들이 직접 보상업무를 4명이 10개 공원의 인허가 업무 등을 모두 맡고 있고 아직까지 보상담당도 없어 업 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전 국 자치단체 중 이런 사례는 광주가 유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봄 기운을 느끼고 있다

원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만개한 홍매화길을 걸으며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_{
m 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정찬주 다큐 소설 '광주 아리랑'

'기생충' 효과 … '짜파구리' 인기 ▶15면

KIA 박찬호 유격수 자리 넘본다 ▶20면

코로나19 진정 국면 … 공장 재가동 불안감 떨쳐내고 경제・소비 나서야

보건당국 "집단행사 괜찮아"

코로나19 감염증 여파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멈췄던 공장들이 재가동에 들어 가면서 침체일로를 걷던 광주·전남 지역경 제도 차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 다. 하지만 외식업과 숙박업, 여행업 등 일 부 업계는 여전히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신중한 대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6·7면〉

12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그동 안 중국에서 생산되던 전장부품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 공급 차질로 최근 2일간 '셧다운'에 들어갔던 1·3공장 이 이날부터 다시 가동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8~9일 광주·곡성·평택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던 금호타이어도 이미 재가 동에 들어갔고, 중국 현지 와이어링 하네 스 공장도 생산재개에 돌입하면서 지역 산 업계의 위기감도 사그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 주점, 지역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도 지난 10일 휴점 이후 다시 영업에 나섰고, 급감 했던 매출도 점차 회복세에 접어드는 것 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정부는 WHO가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COVID-19'로 결정함에 따라 한글표현은 '코로나-19'로 정했다. 'CO' 는 코로나(corona), 'VI' 바이러스 (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음식점과 여행업, 이 미용업 등 이른바 지역 '골목상권'은 감염 우려와 불 안감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예 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침체된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경제·소비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우려로 지역 축제나 시험 등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 의 '집단행사 권고치짐'을 마련해 시행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서 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불안감 떨치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경제활동 위축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 조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노벨상급 석학' 모셔올까

한전공대 초대 총장 선임 임박…후보자 3명으로 좁혀

한전공대 초대 총장 선임이 임박했 다. 이달 중 총장 후보자를 3명으로 압 축하고 다음달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 다. 한전이 공언한대로 '노벨상급 석학' 을 초대 총장으로 데려올 수 있을지 관

전남도는 12일 "한전공대 총장 선임 일 정 등이 담긴 한전공대 설립 추진 관련 업무 보고 자료를 최근 전남도의회에 제 출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6~7월 초대 총장 후보자 초빙공 고 등을 통해 국내외 100여명의 인력풀 을 확보했다.

지난해 말까지 후보자를 10명을 뽑고, 현재 3명으로 좁혀가는 과정이다.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자를 한

전 사장에게 전달하면 3월중 한전 사장 이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전은 학교법인 설립 후 조기에 초대 총장을 선임해 총장 주도의 대학 설립 체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다.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한전 측은 지난해 9월 30일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교육부 대학설립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과 1월 31일 2차레 심의 에서 모두 보류(계속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설립 허가가 보류된 것은 대학 부지 증여 주체 및 시기, 교사 건축 일정 및 운영비 조달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 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